

인권정책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34
----------	------

발의연월일 : 2025. 3. 28.

발 의 자 : 김영배 · 이학영 · 홍기원
문정복 · 박희승 · 윤건영
이기현 · 윤종균 · 고민정
한정애 · 김종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5년 단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 없이 수립·시행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더불어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체계가 국제인권조약과 유엔인권이사회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인권 신장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나.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 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 바.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사. 기업의 인권준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아. 국가기관 등의 인권교육 실시의무를 명시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자.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지정함(안 제24조).

인권정책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인권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

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권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와 그 추진 방안
3.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제17조에 따른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된 권고안을 존중하여 기본계획

안을 작성하고, 공청회와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인권 상황의 반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기본계획안의 확정 절차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인권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연도별시행계획과 전년도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

의 장에게 연도별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도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인권정책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는 제외한다)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연도별시행계획에 반영하

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권정책 추진성과(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한다)를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지역계획에 따른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인권상황 백서)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국내 인권상황, 인권정

책 추진성과 및 평가 등이 포함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연도별시행계획·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 점검·평가와 추진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제12조(국가인권정책위원회) ①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이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권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연도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와 인권정책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권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5.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과 제16조에 따른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협의·조정하고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인권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이하 “지방인권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적인 조사
2.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권고 및 공표
3. 지방인권정책의 수립
4. 제20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무
5. 제21조에 따른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인권기구가 그 사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인권보호에 관한 학계 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 민간단체 또는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인권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방법·절차, 시정권고와 공표의 방식 등에 관한 지방인권기구의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인권기구의 사무 범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권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

제16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하여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보고서에 관하여 표명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인권정책 분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보고서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기구 등의 심

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심의 절차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고서의 작성과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이를 인권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관한 권고 이행, 권고 내용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기업과 인권

제18조(기업의 인권준중책임) ① 기업은 국내·국외에서의 기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업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이 제18조에 따른 인권존중책임(이하 “인권존중책임”이라 한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침·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을 위한 세부 지침

2.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 관련 정보의 자율적 공개를 위한 표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실천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침·표준 마련, 제3항에 따른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인권교육

제20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시설(이하 “인권교육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

하기 위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6.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금·보호시설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8.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 그 밖에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 및 시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인권교육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인권교육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5. 그 밖의 인권교육 관련 단체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무기관의 장이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정책의 개발·추진을 위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나 관계 외국단체·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23조(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인권의 날) ①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인권 보호·존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정부보고서”를 “국가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정부보고서”를 “국가보고서”로 한다.